

친환경 농가 해마다 감소, 3년새 24% ↓

김종희, 국내 여건 맞는 친환경 인증제도 마련 촉구

문제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제시했지만 정작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사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친환경 인증 농산물 농가수' 현황을 보면, 2014년 25만호에 이르렀던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17년에는 19만호로 24% 감소했다.

문제인 정부는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기반 확충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농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8만114ha로 전체 농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했다.

시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2014년 대비 84% (2431호)에 이르는 농가가 친환경 농

업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60% (469호), 경북 59% (22,308호), 대전 46%(109호) 순으로 친환경 농가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 친환경농가수가 84%(567호) 증가하였고, 세종 역시 46% (148호) 증가폭을 보였다. 품목별 감소현황을 보면, 과실류가 51% (18,216호)로 크게 감소, 고구마 같은 서류는 20% (1,974호), 채소류 25% (22,615호), 곡류 16% (15,403호)로 뒤를 이었다. 김종희 의원은 "농가는 소득과 판매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지만, 농업과정에서의 친환경 여부 가 아닌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도 과도한 검사, 서류작성 및 제출 요구 등으로 농가 행정 부담 비용이 상승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농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외국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도입시키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농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업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6 반도체공장 준공식 일정을 마치고 최태원 SK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식육역제 무분별 처방 심각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육역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152건 적발
올 8월, 전년 적발수 넘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가 1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및 시도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유출 현황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인재, 기술 확보 시도가 가시화되며 산업계의 최대 고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요 협력사 A社·B社에 취업했던 외국인이 각 회사에서 보유한 'ING선 연료공급장치 설계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이메일·USB를 통하여 빼낸 후 인도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려 7건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올해 1월 25일부터 9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 마련에 몰두했지만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건수가 이미 작년도 적발건수를 넘어가면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12개 분야 6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그야말로 우리 산업경쟁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기술들"이라며 "정부가 올 초부터 장시간에 걸친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올해만 해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년을 넘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34세 환자는 3개월간 24개 병원을 전전하며 총 1,353정을 처방받았고, 58세 환자는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인 3,870정을 처방받기도 해 마약류 밀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육역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세 환자 한 명이 24개소 병원을 옮겨 다니며 73회 걸쳐 1,353정의 식육역제(펜터민)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동 기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57건, 기계 31건, 조선·자동차 22건 등 주로 주력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총리실, 연설문 민간인 작성 의혹 해명

"초안·구성 도와 자문료 지급... 법적근거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총리실은 "원고 자료를 맡긴 것이며 자문료 지급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총리실 회의참석수당을 분석한 결과, 방송작가로 알려진 박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관련 회의 참석 대가로 98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총리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5명의 실무 인력이 배치돼 있음에도 외부 작가에게 연설 작성을 맡겨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민간인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소통메시지 비서관실 실무진 5명 모두 연설문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소통메시지 비서관 아래 연설문을 쓰는 직원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지원 업무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어 "지난 3월 직원 한명이 퇴사했고, 4월에는 비서관도 그만뒀다"며 "5월부터는 직원 1명이 연설문 업무를 했다"며 "인력 부족으로 외부 작가에게 자문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이 된 자리를 메꾸려고 해도 연설문 작성은 특화된 작업이라 채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약 5개월 간 공식이었던 소통메시지 비서관을 지난 1일 임명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자문위원을 들 수 있는 법적 규정에 따라 외부작가에게 자문했고, 이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줬다"고 강조했다. 작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두 편 정도 연설문 초안을 잡거나 연설문 구성에 대한 자문을 했다"며 "직접 쓴 적도 있지만, 모든 연설문은 총리가 직접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된다"고 전했다.

국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연설문 작성 과정에 기밀이 나갈 이유가 없다. 연설문은 외부에 공개된 통거나 자료를 가지고 쓴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성범죄 의혹' 검사 5년간 10명 감찰

중징계는 단 2명 불과

최근 5년 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는 총 10명이었고, 이 중 단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6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23명이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중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8명으로 조사됐다.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19명)과 견책(22명) 처분 대상은 총 41명이었다.

중징계 사유 중 금품 수수는 6명, 향응 수수는 5명, 성희롱·성범죄는 2명이었다. 또 이들 3가지 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금품 수수 1명, 향응 수수 3명, 성희롱·성범죄 4명이었다. 성희롱·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6명이었는데, 이는 총 10명을 감찰한 결과였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검찰을 떠난 뒤 올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로 기소된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이 된 검사 6명(정직 3명·해임 3명) 중 해임된 3명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임된 3명의 총 납부 대상 금액은 2억1100만여원임에도 납부금은 1150만여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변산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료승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먹거리: 특산물 전시 및 시식

부안군